

# EDF 법적대응 발목... 안덕근 “최종 계약, 큰 문제 없을 것”

(프랑스전력공사)

##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

불공정경쟁 이의 제기... 법원 인용 안 장관, 체코 현지서 긴급 기자회견 “본계약 외 다른일정 계획대로 진행”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 체결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단 때문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CEZ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관련 긴급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있다. /산업부

간)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한 EDF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체코 경쟁당국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은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단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단일한 대응을 한 것

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항소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 이외 다른 일정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체코 의회 상원의장과 오찬을 진행하고,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의도 그대로 진행된다. 또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 약정에도 안 장관이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열린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 최종 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계약이) 최대한 신속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본계약 일정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원전)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그리어 USTR 대표, 내한 예정... ‘APEC’ 협상 무대 관측

(美 무역대표부)

## 한미 관세협상

양국 실무논의 단계... 조기 타결 관건 이 대행, APEC서 장관급 회동 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무 논의를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고,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달 중순 내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속 타결 여부가 특히 더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파악하기 어

렵다. 다만 협상 대상국 모두를 유예시킨 7월 상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5월이나 6월 중 언제라도 미국과 양자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앞서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협정 체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리머지않은 미래에 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관세 수위를 정하겠다”며 “향후 3, 4주 내로

(관세 협상을)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시 조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점 역시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 4주 내에 마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첫 번째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르면 이번 주 가장 큰 무역 대상국들 중 일부와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우리 측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PEC 행사장 내 장관급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미 간 장관급 및 추가 기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고 말했다.

다만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 국의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군 주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 가격을 정할 때 통계를 포함해 그 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비 지출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어업대전환**

**혁신성장을 이뤄갑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스마트양식을 통한 대량 생산체계 조성

**수산가공산업 육성**  
수산식품 스마트가공 생태계 구축

**수산업유통 역량강화**  
복합유통공간 조성, 시장중심 물류체계 구축